

2013 2015
2014

활동보고서

사단법인 오픈넷 Open Net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서초동, 한림빌딩)

전화 02.581.1643

팩스 02.581.1642

이메일 master@opennet.or.kr

홈페이지 opennet.or.kr(국문) / opennetkorea.org(ENG)

CONTENTS

3	오픈넷 소개
	오픈넷 사람들
4	- 이사진
6	- 실무진
7	오픈넷이 걸어온 길
11	숫자로 보는 오픈넷
12	사진으로 보는 오픈넷
	오픈넷 활동
17	- 표현의 자유
19	- 지적재산권
21	- 프라이버시
23	- 망중립성
24	- 열린 정부
25	- 혁신과 규제
	열린 인터넷을 위한 동행
26	- 오픈 세미나
31	- 오픈넷 아카데미
34	오픈넷 살림살이
37	후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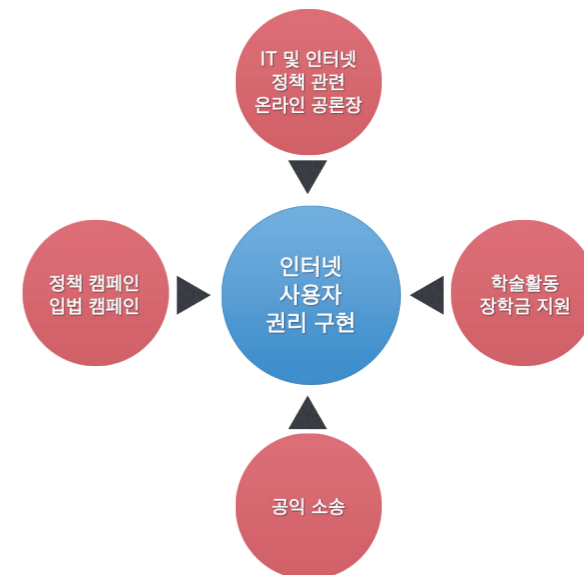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2012년 12월에 설립된 NGO입니다.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이용, 저작권 특허 제도의 개혁, 망중립성 등의 영역에서 우리 인류가 중요하게 여겨온 가치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픈넷은 인터넷/IT 정책의 지평을 넓혀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올바른 정책이 채택되도록 법 개정 운동, 대중 캠페인과 공익소송을 기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IT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 및 학술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미래의 연구 인력을 위한 장학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오픈넷 임원진에는 고문을 맡고 있는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 이사진에는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 김기중(법무법인 양재 구성원변호사), 남희섭(변리사),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조산구(코자자 대표),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픈넷 실무진은 허광준 정책실장, 김가연 변호사, 박지환 변호사, 추미선 간사 및 손지원 자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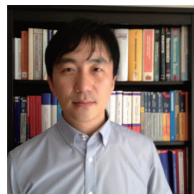
남희섭 이사장

오픈넷 3주년을 축하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그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오픈넷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30년 더 지속되는 운동과 활동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우지숙 이사

사회적 정의도, 질병과 사고의 예방도, 과학과 예술의 발전도 모두 열린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열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열린 인터넷 공간이 필요하다는 믿음에서 오픈넷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인터넷을 위한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닫혀있는 문 뒤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행태와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는 참여의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정수 이사

인터넷에서 이용자 권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었습니다. 싸움을 멈출 때, 싸움이 약할 때 인터넷은 소수 기업과 정부가 지배하는 공간이 됩니다. 오픈넷이 지난 3년처럼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시민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임정욱 이사

오픈넷에 참여한 지 저는 이제 반년이 됐습니다만 오픈넷 구성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한국의 인터넷을 조금씩 개방적으로 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오픈넷 식구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열린, 소통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저도 함께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이사

표현의 자유 확장, 지적재산권 합리화, 감시와 관찰로부터 자유, 망중립성 원칙 수용, 공공데이터 개방과 열린정부 구성, 기술혁신과 규제합리화. 오픈넷 홈페이지의 주메뉴로, 오픈넷이 추구하는 목표이며 가치입니다. 오픈넷은 항상 이 목표를 생각하고 이 가치에 맞게 행동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조산구 이사

인터넷 사용자 한 명으로도 오픈넷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좀 더 열심히 오픈넷 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인터넷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우리 생활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오픈넷의 자유, 개방, 공유를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오픈넷 여러분 힘내세요. 오픈넷 만세!



박경신 이사

오픈넷 올해 목표는 내년 편당을 마련하는 것이고 내년 목표는 내후년 편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편당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목표대로 열심히 하면 편당은 따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참견 부탁드립니다.



황성기 이사

오픈넷이란 말 그대로 '열린 네트워크'일 것입니다. 우리 오픈넷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열린 사회가 되기 위해, 그리고 독선보다는 소통과 이해, 억압이나 강제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오픈넷에 대한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픈넷 구성원도 지금까지 해온 것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광준 정책실장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조직 오픈넷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자칭 새내기입니다. 그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 나가나 감탄해 왔는데, 이젠 자화자찬이 되겠네요...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오픈넷도 온/오프의 관심과 성원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거인이 열린 인터넷, 열린 사회를 향해 열심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모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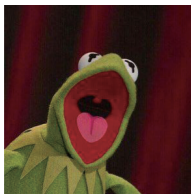
김가연 변호사

이제 겨우 3살 된 오픈넷이지만 인터넷 정책 분야에서 나름대로 독보적인 · 을 몇 개 짚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 들을 찍어나가겠죠? 이 · 들이 이어진 미래의 어느 시점이 한국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오픈넷을 아는 세상, 나아가 오픈넷이 할 일이 없어진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이기를 기대하며! 제가 오래 전부터 꿈꾸던 일들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어 준 오픈넷은 사랑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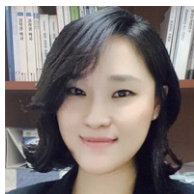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과 함께 3년간 씬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선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무엇보다 공인인증서 이용강제 규제를 폐지시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소송넷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많은 공익 소송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미약하게나마 저작권 분야에서 이용자를 대변하는 판례들을 남길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모이고 계속되면 열린 인터넷 세상이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픈넷을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추미선 간사

오픈넷이 지금처럼 젊고 건강한 시선으로 인터넷과 사회를 바라보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3년 뒤에 돌아보았을 때에는 오픈넷이 지금보다 넓은 영역에서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겠지요? 열린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오픈넷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후원)해주세요.



손지원 자문변호사(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

평균 상근 직원 3명이 행정부터 공익소송, 국제협력, 언론, 입법 활동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며 성장한 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꼰대 사회'를 싫어하는 제가 오픈넷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 모두가 깨어있는 것! 오픈넷이 30년은 더 가서 늘 깨어있는 관용과 자유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설립 ~ 2013년

- 2012. 12. 27. 사단법인 오픈넷 법인 설립
- 2013. 01. 14. 사단법인 오픈넷 사무국 개소
 - 02. 고려대 로스쿨 공익법률상담소 '인터넷법클리닉'과 MOU 체결
 - 02. 20. 오픈넷 창립식 개최
 - 0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 06. 27.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성인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 아청법 적용에 무죄 판결 선고
 - 07. 23-28.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참여, 아청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진행
 - 0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에 아청법 적용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 09. 04-06. 인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참가
 - 10. 22-2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포럼(KRIGF) 참가
 - 12. 30. 오픈넷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4년

- 2014. 03. 18.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식 개최
- 04. 24. 저작권법 개정안(합의금 장사 방지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
- 07. 04.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주관
- 09. 02.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09. 26. 대법원 형사 1, 2, 3부, 성인교복물아청법 적용에 무죄 판결 선고
- 09. 30.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 10. 15. 시행)
- 11. 24. 제 19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사회진흥부문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수상
- 12. 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게시물 삭제 시 게시자 통보에 대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활동

- 2014. 03. RIGHTSCON: POLICY LAUNDERING SESSION 패널 발표
- 07. APRIGF (인도, 델리): SURVEILLANCE 및 INTERMEDIARY LIABILITY에 대한 패널 발표
- 08. ASIAN PRIVACY SCHOLARS NETWORK (일본 도쿄): 국가식별번호 문제에 대한 발표
- 08. NETWORK OF CENTERS' ONLINE INTERMEDIARIES RESEARCH PROJECT SEMINAR (CAMBRIDGE, MA, USA): 패널 발표 및 후속 MODEL INTERMEDIARY LIABILITY RULE 연구작업

2015년

- 2015. 정보개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법적 게시물에 대해서도 정보매개자들에게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임시조치제도 개악) 통과 저지 성공
- 01.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관련 '한국여성민우회'에 법률지원 제공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 이끌어냄. 합의금 장사 방어 선례 마련
- 01.09.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법률지원 제공하여 1심 무죄 선고
- 01.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개선을 위해 오픈넷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웹상에서 통신자료 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 이통 3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확립
- 03. 18.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 05. 28.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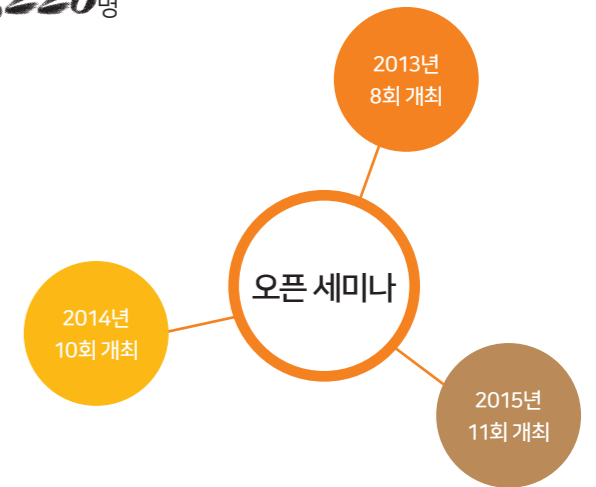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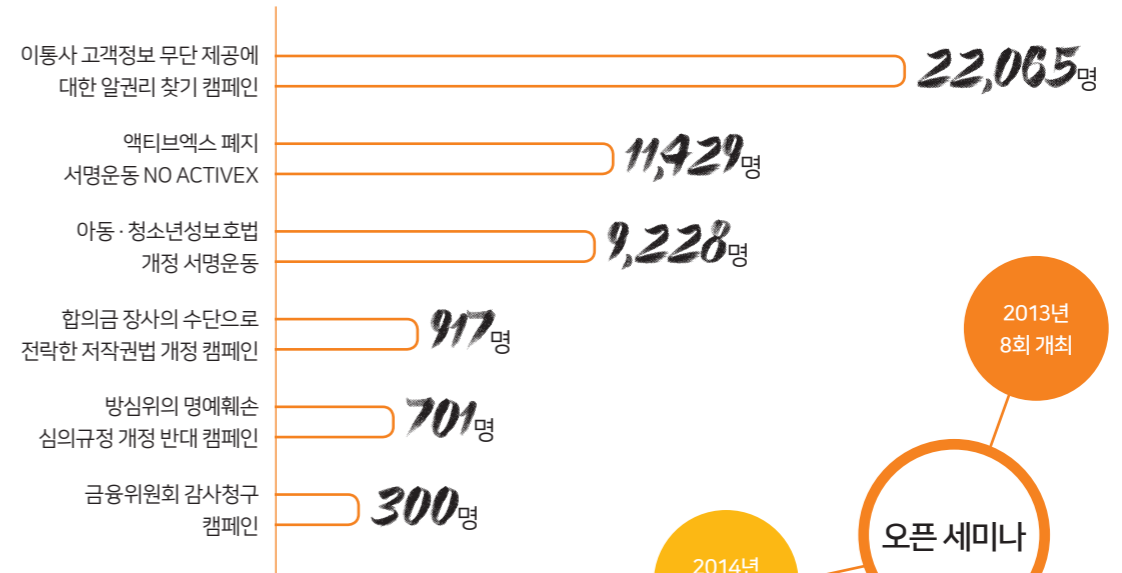
- 06. 29.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 관련 '전쟁 없는 세상'에 법률지원 제공하여 손해배상소송 승소.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 마련
- 08. 08. 국정원 해킹(RCS)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을 구글앱스토어를 통해 일반에 공개 및 무료 배포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가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개발 및 발표)
- 06.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 2015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에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및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보안감사 프로젝트 시작
- 09. 20.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개발, 보급한 안드로이드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 '스마트보안관'에 캐나다 토론토대 시티즌랩에서 1차 감사보고서 공개
- 10. 3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주관
- 11. 01. '스마트보안관'에 캐나다 토론토대 시티즌랩에서 2차 감사보고서 공개
- 11. 25.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에 참여,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공동 주최

국제활동

- 03. 24 - 25. RIGHTSCON(필리핀 마닐라): 세미나 발제 및 토론 참여. EFF, ARTICLE 19 등과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 국제원칙인 <마닐라원칙> 발표
- 05. 04 - 06. FREEDOM ONLINE COALITION 컨퍼런스 2015(몽골 울란바토르): 패널 참가
- 06. 24 - 26.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 2015(캐나다 토론토):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ARE THE KIDS ALRIGHT? DIGITAL RISKS TO MINORS FROM SOUTH KOREA'S SMART SHERIFF APPLICATION)을 발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및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연구 프로젝트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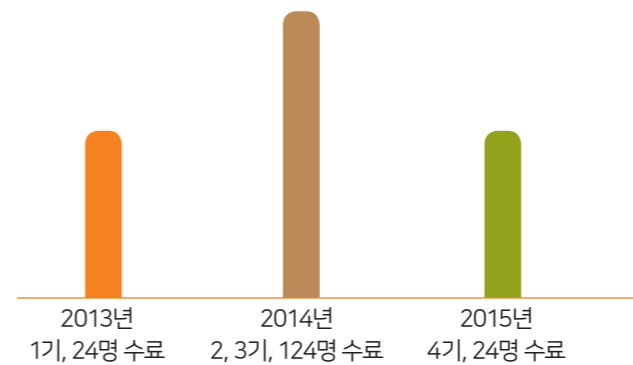
- 07. 01 - 03. APRIGF 2015(마카오): 마닐라원칙 서명운동 진행
- 07. 24. MEDIA CONVERGENCE "NEW THINKING FOR NEW MEDIA"(태국 방콕): "INFRASTRUCTURE FOR THE FUTURE: HOW CONVERGENT MEDIA GOVERNANCE COULD FACILITATE INNOVATIVE ECONOMY AND DEMOCRATIC SOCIETY?"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문제 및 기술 중립성이라는 인터넷 규제 원칙에 대해 발표
- 09. 03 - 04. WSIS(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태국 파타야): 패널 참가
- 09. 07 - 08.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아시아(필리핀 마닐라)
- 10. 27 - 29.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세계(멕시코 멕시코시티):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 간사 역할 배정
- 10. 15 - 16. CC GLOBAL SUMMIT 2015(서울): 패널 참가
- 10. 22 - 23. UN인권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심의(스위스 제네바):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정기심의에서 현장 로비를 통해,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 없이 할 수 있게 한 통신자료 제공(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폐지 권고 도출
- 11. 09 - 13. IGF 2015(브라질 주앙페소아): MANILA PRINCIPLES, BUILDING INTERNET OBSERVATORIES, BENCHMARKING ICT COMPANIES 세션 등 총 5개 세션 참여

캠페인 (2013~2015년)



교육/학술

|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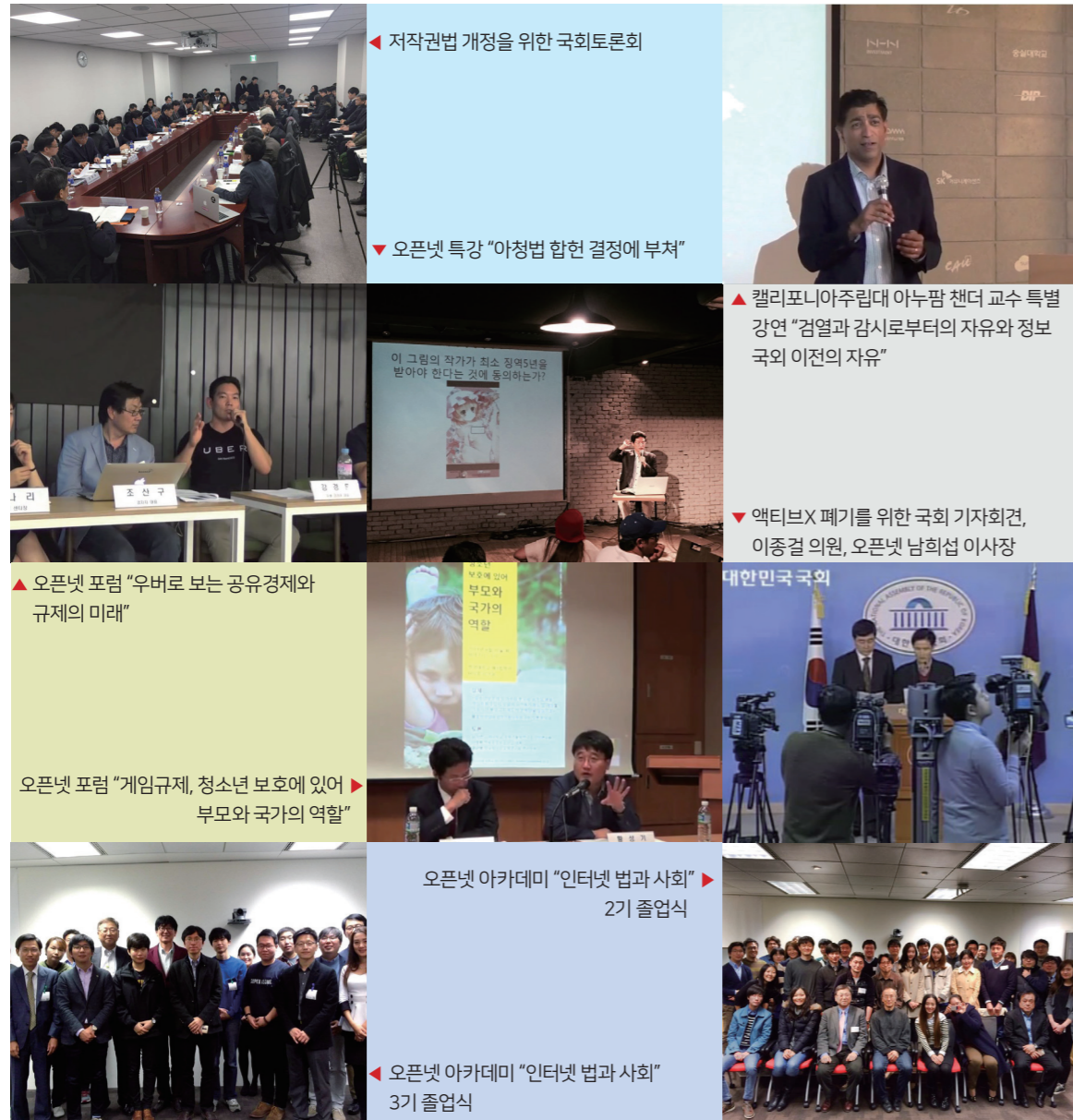


|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

- 연구장학생 8명 선발, 총 2,200만원 장학금 지급

<p>▲ 사무국 블로터와 라이츄콘 2015 후기 인터뷰 중</p>	<p><2015 UN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심의></p>	
		<p>◀ <2016 라이츄콘(RIGHTSCON)></p>

<p>▲ 캐나다 토론토대 시티즌랩 론 디버트 소장 방문</p>	<p>▲ 일본 아마다 타로 참의원관 '후파람새 리본' 오기노코타로 활동가 방문</p>	<p>▲ IGF 2015 Day 2 - WK 7 - WS 60 Benchmarking ICT companies on digital rights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p>
<p>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한국 인터넷거버넌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5.11.11. 서울대학교</p> <p>▲ 201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p>		<p>▲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오픈백신" 발표회</p> <p>◀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책임"</p>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 갑니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인류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오던 자유, 평등, 정의, 정직, 공정한 경쟁, 혁신, 창작 등의 가치는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절실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은 여전히 낯설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체제와는 자못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듯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자아내기도 하고, 달뜬 기대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인터넷과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바라는 결과가 무엇인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룰 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이용자, 사업자, 기술 인력, 규제자들이 서로 반목, 불신하고 적대감과 서운함을 품게 된다면 모두에게 불행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책의 실패일 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가 곧 국민임을 생각한다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실패를 예방하고, 우리의 삶이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인터넷은 그 어떤 매체보다 표현촉진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롭고 활발한 비판과 공적 토론은 속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이 악의적 공격과 불법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픈넷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통적인 매체와 차별화된 인터넷만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공유하고,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한 합리적 구제수단을 모색하는 한편, 인터넷이 다양한 의견 개진과 전파가 보장되는 완전한 사상의 자유시장으로 기능하도록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터넷의 사적 검열과 행정검열이 만연한 나라입니다. 사적 검열을 제도화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해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임시조치 개악 법안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행정검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심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위법한 정보 차단 결정에 대해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앱스토어 비판 웹사이트 차단, 파일공유 사이트 포쇄어드 차단에 대해 손해배상 및 취소판결 등을 얻어냈고 음악스트리밍 사이트 그루브샤크 차단,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 등의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유승희 의원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게시물 삭제시 게시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우는 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에는 방심위의 명예훼손 제3자 심의요청 규정 반대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와 같은 '가상표현물'까지도 실제 아동 포르노와 똑같이 처벌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위해 최민희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하고,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등과 연대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아청법 사법피해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률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4년에는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 아청법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법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를 지원하여 1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으며,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을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고, 2016년에는 모욕죄 합의금 장사 피해자들을 위한 민형사 대응 매뉴얼을 작성, 배포했습니다.

오픈넷을 태동시킨 역사적인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실명제의 일종인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와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현재 휴대폰 실명제 위헌소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관리자에 의해 임시조치된 글입니다.



[캠페인] 임시조치 제도 개선 캠페인 -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를 고발해주세요!



[캠페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2조 5호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지적재산권: 창작과 혁신을 억압하는 저작권·특허 제도에 대한 대안

인터넷은 저작물이 유통되는 기술적 기반, 유통 비용 및 보상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작물이 제작, 배포, 유통, 판매되던 재래의 구조를 전제로 형성된 기존 저작권 제도가 과연 새로운 유통기술과 배포 구조에 적합한 보상 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용자의 절대 다수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법 제도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물리적 제작 공정을 기반으로 삼아 마련되었던 특허제도 또한 별 다른 반성 없이 소프트웨어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되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제도가 과연 혁신을 촉진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창작자와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저작권, 특허 제도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과연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내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조약 및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2016년 4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무협소설 작가 4명의 고소 건수가 지난 1년간 1만4천여 건에 이를 만큼 누적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 처분이 완료된 사건 2만7천133건 중 실제로 기소된 것은 2천397건에 불과하여 전체 사건의 10%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반면 합의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1만3천93건(48.3%)에 달했습니다. 오픈넷은 이와 같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방지를 위해 크게 저작권법 개정과 공익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우선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가능해진 이유가 현행 저작권법이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라고만 보이면 바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판단하여, 비영리 또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안하고 입법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해당 저작권법 개정안은 순조롭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쉽게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오픈넷은 20대 국회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오픈넷은 공익소송을 통해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방어하고 공정이용의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300여명의 토렌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소에서 합의금 수령의 목적으로 제기된 공동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내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의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사진 저작물의 비영리적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이 인정된 최초의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ARIRANG TV] 미드자막, 팬덤인가? 불법(저작권침해)인가? (2014.08.21.)



[캠페인]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략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프라이버시: 감시와 관찰로부터의 자유

온라인 세상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흔히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의 모든 행위는 기술적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흔적은 집적, 취합, 처리,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관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정당한 법 집행상의 필요가 있거나 개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원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정부나 기업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개인이 원치 않음에도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수시로 감시·관찰 당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닌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픈넷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민감시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과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정청래 의원과 함께 정부의 무분별한 사찰 방지와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이버사찰방지법 패키지(4개 법안)를 발의하고 입법운동을 해왔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사실 통지 관련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와 같이 아직도 잔존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했으며, 2014년에는 본인확인기관에 주민번호를 자유로이 수집하도록 허용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한 오픈넷의 활동은 주목할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참여연대와 함께 이통사를 상대로 알 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여 이통3사가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확인해주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 이용자들이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한국 심의 시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 로비를 펼쳐 위원회로부터 통신자료제공 제도 폐지 권고를 받아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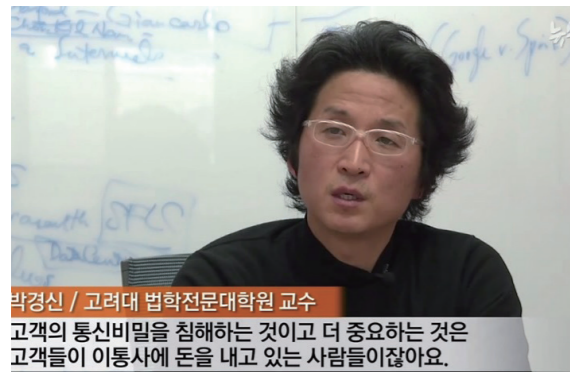
또한 모든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를 강제하는 일명 청소년스마트폰감시법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외신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대 학교 시티즌랩(CITIZEN LAB) 연구소와 연대하여 방통위가 지원하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개발·보급한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수행, 청소년들을 보안 위협에 빠뜨리는 수십 가지 취약점을 발견해서 공개한 결과 스마트보안관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통신감시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정보인권단체들이 발표한 통신감시원칙(NCESSARY AND PROPORTIONATE PRINCIPLES) 제정에 참여했으며, 2016년 라이츠큰(RIGHTSCON)에서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씨를 초빙, 통신자료제공 세션을 주최하여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또한 인도, 파키스탄 등지의 정보인권단체와 함께 국가신원확인제도의 실태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광주MBC] 수사기관 개인정보-통신자료 제공 확인법 (2015.03.25.)



[뉴스타파] 왜 내 정보를?...통신사상대 소송뿔을 예고 (2015.03.03.)

아시나요?
당신의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동통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자등

수사기관

2013년 약 730만명
2012년 약 577만명
이동전화 통신자료제공 전화번호 수 추산

내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몰래 넘겨졌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 홈페이지로
opennet.or.kr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캠페인]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오픈넷, 참여연대)

망중립성 확보

인터넷은 모두의 것이자, 특정 기업의 것이 아닙니다. 망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이나 프로그램의 전달과 사용을 가로막는다면 기술혁신이 방해받고,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망 사업자들은 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기업들을 포함하여)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게 이용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합리적인 망 관리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망 사업자들에게 어느 수준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규제 당국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 전략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가 국내 기업들에 의해서는 자유롭고 활발하게 개발,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기업들이 언제나 새로운 기술개발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들이 과점적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MBC 김주하의 이슈토크] 통신사,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할 수 있나? (2013.09.05.)

특히 이동통신 3사에 의해 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 정책이 가지는 함의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픈넷은 설립 이후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내적·국제적 노력을 함께 경주해왔습니다. 우선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연구를 시작으로 19대 국회에 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여 발의된 바 있습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망중립성 정책자료 정보 공개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M-VOIP 이용을 차단 및 제한하는 이통사의 약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이나 라이츠큰(RIGHTSCON) 등 국제회의의 망중립성 세션에 매년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정책의 국제적 흐름을 국내 이용자에게 소개하는 오픈넷 포럼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정책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토론회를 기획 중입니다.

열린 정부: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공공 데이터 개방에 가장 직접적이고 절실하게 적용됩니다. 세금으로 구축된 공공 데이터는 비밀 정보가 아닌 한 자유롭게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모두 개방되어야 합니다. 보안, 책임 소재, 비용 징수, 사용 신청/허가 절차 등 개방에 저항하는 상투적 주장들이 거듭 제기되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설득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공 데이터의 자유로운 재사용은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 수행이 비밀주의의 장막에 가려져 있다면 그만큼 국민은 왜소하고 무력해지며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려워집니다. 기업들 중에서 정부 못지않게 공적 책무를 지닐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픈넷은 열린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범정부 기구인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시민 사회 섹터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가 더 많은 공공 데이터를 정보 공개청구제도를 통해 또는 선제적인 공개를 통해 국민과 나누도록 독려와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규제: 폐쇄적 규제 개정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폐쇄적인 규제로 활력을 잃는 때가 있습니다. 허울 좋은 핑계를 내세우지만 실효성도 없고, 기술혁신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규제들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술혁신과 더 나은 서비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규제는 한시바빠 개정되어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허가, 인가, 등록, 신고를 요구하고, 금지부터 해놓고 보자는 독특한 ‘규제 습관’도 이제 과감히 떨쳐낼 때가 되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청소년 보호라는 과제를 마치 무슨 기술조치 하나만 강제하면 당장 달성되는 듯 학부모를 호도하는 단기적 규제가 남발되어, 정작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해법을 자발적으로 모색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단기효과에 치중하는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환경과 사업기회가 보장되며 국내 기업이 세계무대로 성장할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 X)로 요약되는 국내 인터넷의 폐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픈넷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오픈넷 개소와 동시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위해 법률안 제안 및 각종 정책토론회,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9월 드디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변화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KBS 파노라마] 공인인증서의 덫에 걸린 IT 강국 (2014.11.07)

이후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핀테크 열풍에 발맞춰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 각종 규제들을 걷어내기 시작하였고, 혁신적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이용자들이 체감할 정도로 전자금융거래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20대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 운동을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캠페인]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NO ACTIVE X

오픈 세미나

2015년

- 03. 03. [국회 토론회] “핀테크 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 04. 30.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05. 28. [국제 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오픈넷,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 국회의원 박주선, 엄동열, 유승희,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공동주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후원, 국회의원회관
- 06. 22.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07. 09. [긴급 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오픈넷, 벙커1 공동주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연, 벙커1 지하벙커
- 07. 20. [국회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 오픈넷 및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총 9개 단체)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 07. 30. [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 08. 12.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09. 23.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 “이용자에게 묻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11. 11.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12. 14.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송호창 공동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14년

- 04. 16. [저작권 대토론회]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오픈넷, 국회의원 박해자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 04. 17. [저작권 대토론회] “창작자 보호법 ‘백히나-조용필 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오픈넷, 국회의원 배재정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 04. 24.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NSA 사태와 브라질 MARCO CIVIL DA INTERNET”
- 오픈넷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 아누팜 센터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쿨 교수 강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05. 28. [오픈넷 포럼]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호주, 한국, 인도, 홍콩 상황을 중심으로”
- 오픈넷 주최, 그레이엄 그린리프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 강연, 구글코리아
- 06. 09. [오픈넷 포럼] “인터넷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검색서비스 링크 삭제 판결을 중심으로”
- 오픈넷 주최, 디캠프
- 08. 27.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 오픈넷 주최, 네이버 후원, 마이크임팩트스퀘어
- 09. 30. [오픈넷 포럼]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
- 오픈넷 주최, 네이버 후원,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 11. 18. [오픈넷 포럼]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 오픈넷 주최, 디캠프
- 11. 27.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가버너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12. 18.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 오픈넷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13년

- 02. 27. [국회 토론회] “전자금융거래 보안 기술의 다양화”
- 오픈넷,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공동주최, 국회도서관
- 03. 27. [오픈넷 포럼] “인터넷 실명제 제2라운드”
- 오픈넷, 고려대학교 정보통신법학회 공동주최, 고려대학교 CJ법학관
- 04. 24. [국회 토론회]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오픈넷, 국회의원 김윤덕 공동주최, 국회도서관
- 05. 23. [국회 토론회]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최재천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 06. 13. [국회 토론회]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오픈넷, 국회의원 유승희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 08. 12. [국회 토론회]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피해자 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오픈넷, 국회의원 김광진, 박완주, 이석기, 전정희, 최민희 공동주최, 아청법대책회의 주관, 국회의원회관
- 12. 13. [국회 토론회]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 오픈넷, 국회의원 유승희 공동주최, 국회도서관
- 12. 18. [국회 토론회]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 오픈넷, 국회의원 최재천 공동주최, 국회의원회관

The collage consists of 15 posters, each representing a lecture in the OpenNet Academy series. The posters are arranged in a grid-like fashion, with some overlapping. The topics include:

- 19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에 사다** (19 Comics, Regulation of Illegal Pornography)
-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공개자 책임** (Prosecution of Lee Se-woo, Former CEO of Daum/Kakao, and Responsibility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ers)
- 핀테크와 금융규제, 갈등과 전망** (Fintech and Financial Regulation, Conflict and Outlook)
- 정보유통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International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Domestic Regulation on Information Distributors' Liability)
- 이용자에게 물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이지 않을까?** (We Ask Users: How is the Korean Internet Usage Environment, Not Getting Better?)
- 강제적 개인식별번호 부여 반대 운동의 역사** (History of the Movement Against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
-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Youth Smartphone Filtering, How Far Have We Blocked?)
- 게임 규제, 청소년 보호에 있어 부모와 국가의 역할** (Game Regulation, The Role of Parents and the State in Protecting Children)
-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Cultural and Knowledge Co-creation: P2P Technology and Digital Democracy)
- 우버?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Uber? Looking at the Future of the Sharing Economy and Regulation through Uber)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Need for Public App/Web Development Guidelines: Startup Governance, Public Good or Ecosystem?)
- 오픈넷 포럼: 검열과 감시로부터의 자유와 정보 국외 이전의 자유 NSA 사태와 브라질 Marco Civil da Internet** (OpenNet Forum: Freedom from Censorship and Surveillance, Freedom of Information Cross-border Transfer, NSA Case and Brazil's Marco Civil da Internet)
-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Discussion and Vaccine Program Announcement for Resolv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Hacking Case)
- 오픈넷 포럼: 양중립성 규제를 둘러싼 최근 이슈:제로 레이팅(Zero-rating)과 OTT** (OpenNet Forum: Recent Issues Surrounding Neutrality Regulation: Zero-rating and OTT)
- 저작권 대토론회** (Copyright Debate Conference)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1기>

- 2013. 06. 28 - 08. 29(총 10주 과정), 수료생 총 24명 배출

[커리큘럼]

- 1강 | 미디어 변동 역사와 네트워크 경제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 2강 | 인터넷 디지털 시장 변동 - 이준웅(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3강 | Active X, 공인인증서, JAVA 무엇이 문제인가 -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4강 | 이용자들에게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 5강 | 인터넷 차단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 - 양파
- 6강 |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 실전화기부터 공유기까지 인터넷의 근본 원리 - 고양우
- 7강 | 망중립성, 통신시장 및 규제 이해하기 - 전용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8강 | 지적재산권 다시 생각하기 - 김기중(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오픈넷 이사)
- 9강 | 소프트웨어 산업 다시 생각하기 - 김국현(에디토이 대표)
- 10강 |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 23가지 신화타파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인터넷 법과 사회 2기>

- 2014. 01. 09 - 03. 06(총 8주 과정), 수료생 총 64명 배출

[커리큘럼]

- 1강 | 미디어 변동과 저항, IT 강국의 몰락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 2강 |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 인터넷을 제약하는 기술 - 고양우
- 3강 | 비트코인과 디지털 경제 - 김진화(KORBIT[비트코인 거래소] 이사)
- 4강 | 인터넷 살리기: 왜 망중립성인가 - 전용휘(녹색소비자연대 이사)
- 5강 | 게임규제를 둘러싼 프레임 논쟁, '4대악' 패러다임의 힘 - 이병찬(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 6강 | 23가지 신화 타파(저작권,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등)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 7강 |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8강 | 저널리즘의 현주소와 디지털 뉴스시장 갈등구조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인터넷 법과 사회 3기>

- 2014. 09. 04 - 10. 30(총 8주 과정), 수료생 총 60명 배출

[커리큘럼]

- 1강 | 미디어 변동과 저항, IT 강국의 몰락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 2강 | 꼭 알아야 할 인터넷 헌법 판례 5선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 3강 |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기술, 인터넷을 제약하는 기술 - 고양우
- 4강 |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구글 스페인 판결을 중심으로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 5강 | 게임 규제를 둘러싼 프레임 논쟁, '4대악' 패러다임의 힘 - 이병찬(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 6강 | 지적재산권 다시보기 - 남희섭(변리사/오픈넷 이사장)
- 7강 | 저널리즘의 현 주소와 디지털 뉴스 시장 갈등 구조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 8강 |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과 발전 방향 - 김진형(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카이스트 교수)

<인터넷 법과 사회 4기>

- 2015. 02. 26 - 04. 02(총 6주 과정), 수료생 총 24명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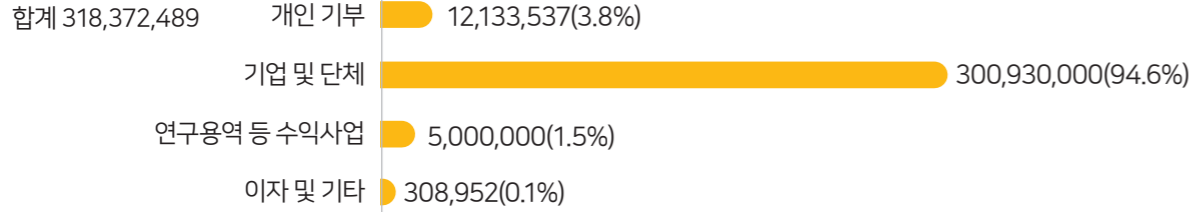
[커리큘럼]

- 1강 | 혁신과 규제: 기술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 2강 | 디지털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 3강 | 지적재산권 다시보기(강의 및 김장훈 불법다운로드 논란 관련 공개토론) - 남희섭(변리사/오픈넷 이사장)
- 4강 | 인터넷의 자유, 혁신, 개방과 망중립성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5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현황과 이슈 -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6강 | 한국경제, 디지털 전환과 포석 -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오픈넷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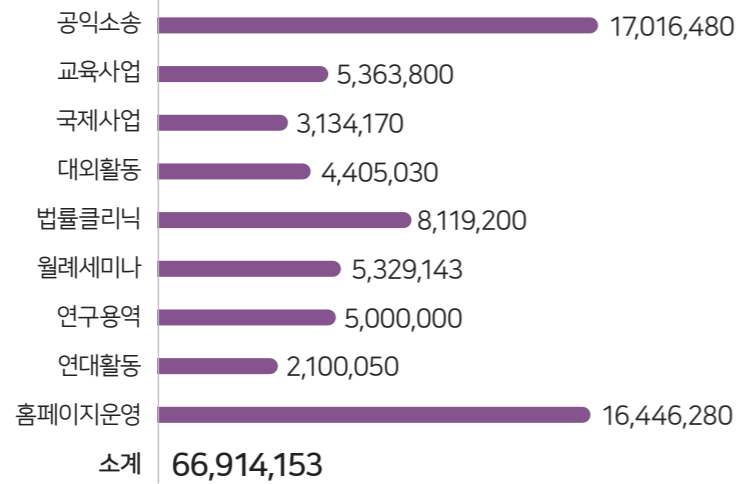
2013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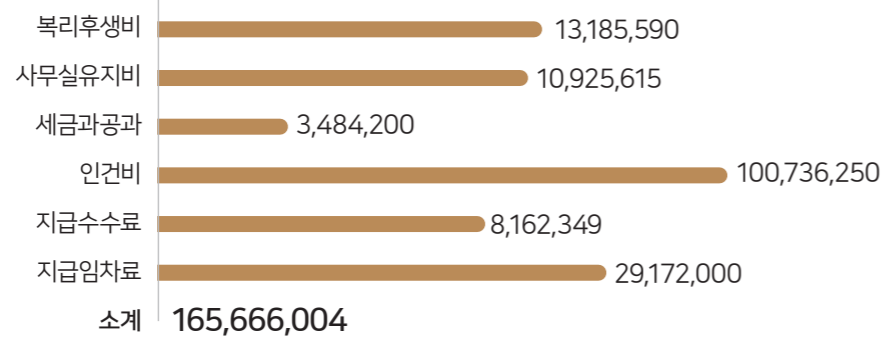


지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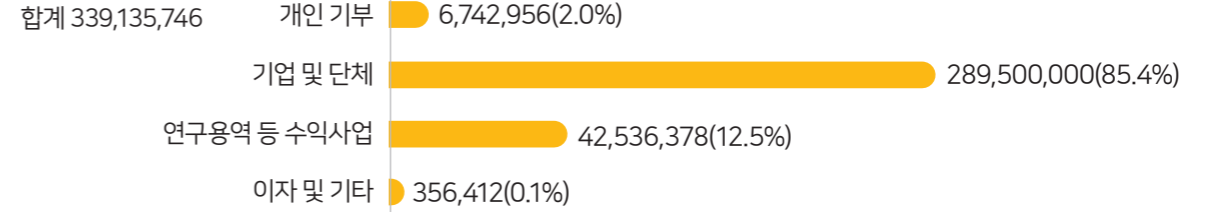
운영비



수입 318,372,489 - 지출 232,580,157 = 85,792,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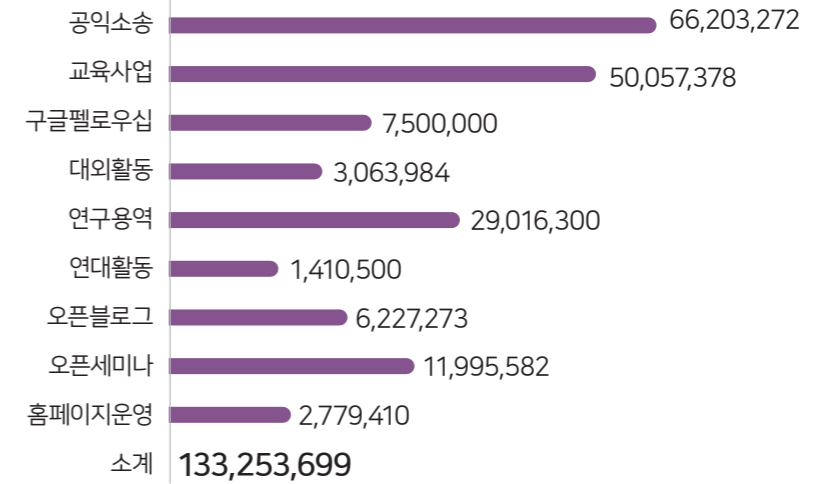
2014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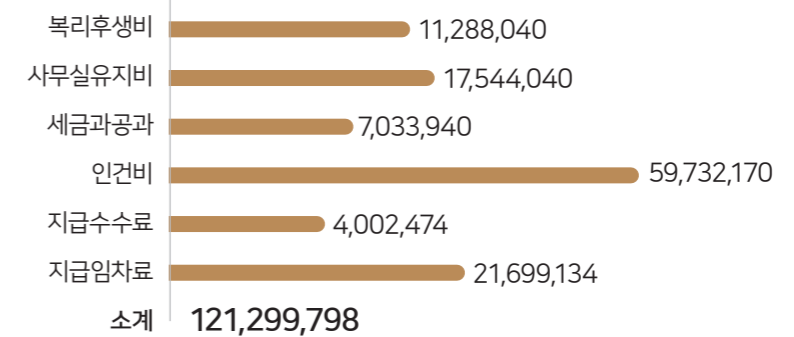


지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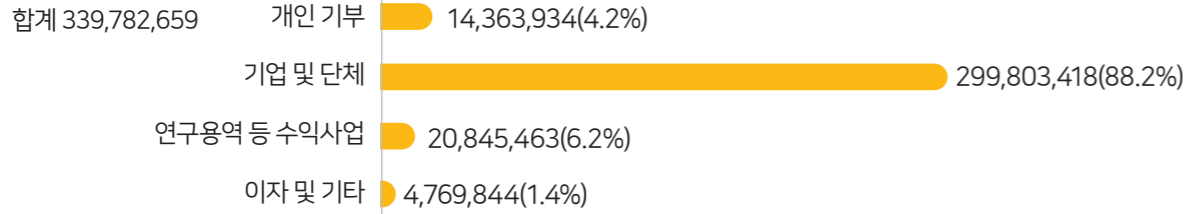
운영비



수입 339,135,746 - 지출 254,553,497 = 84,582,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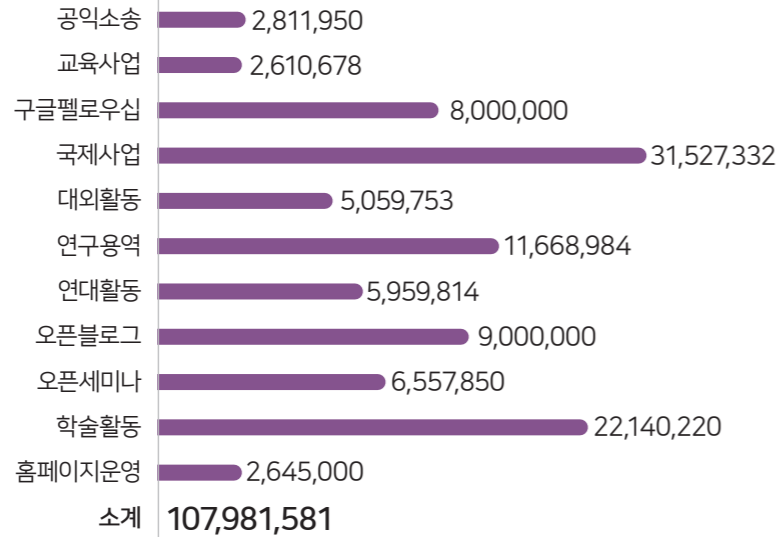
2015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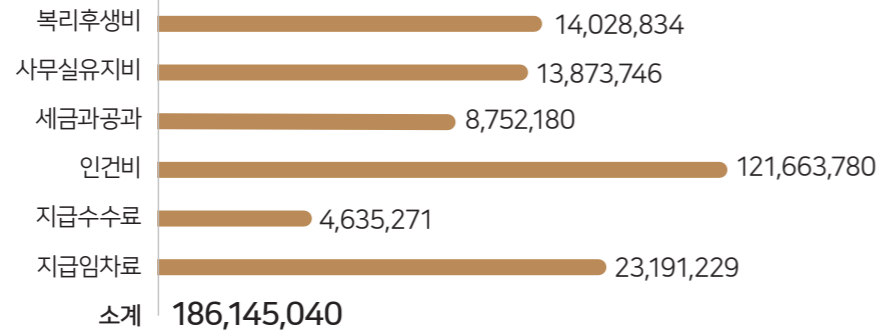


지출

사업비



운영비



수입 339,782,659 - 지출 294,126,621 = 45,656,038

“ 오픈넷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적지 않은 돈이 드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부를 해야만 오픈넷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원을 통해 오픈넷의 준회원이 되어 주시면 더욱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노라고 알려주시고 동참하도록 권해주시면 이미 여러분은 “핵심 멤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오픈넷의 활동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오픈넷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건 작건 후원금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은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이 정책은 앞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 오픈넷은 기업의 후원금을 고맙게 받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원 신청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어떤 기업도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픈넷이 야멸차게 비판하고, 그런 비판이 아프고 서운하게 여겨지면 후원금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 오픈넷의 활동이나 지향이 자신에게 유리한 기업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희망은 더 많은 기업들, 아니 모든 기업이 오픈넷의 활동으로 크게 ‘덕’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 혁신,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 개인의 존엄과 정의를 일관되게 추구합니다. 어느 기업이라도 이러한 가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그런 기업은 우리의 열렬한 찬사와 전폭적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오픈넷은 기업들이堂堂하게 경쟁하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오픈넷은 그 예산 및 지출 내역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러나 후원자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오픈넷의 후원자(준회원)가 되시면 오픈넷의 활동에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으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 오픈넷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내주신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픈넷을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매월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214-910028-03804 (사단법인 오픈넷)

※ 후원 계좌로 입금 시, master@opennet.or.kr로 본명과 이메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정보 확인 필요)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CMS 출금이체 신청서

□ 수납기관 및 요금 종류

수납기관명	사단법인 오픈넷		
대표자	남희섭	사업자등록번호	105-82-20796
사업장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	수납 요금종류	후원금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출금계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는 등록번호)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예금주 휴대전화	
신청인명		예금주와의 관계	본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신청인 연락처		신청인 휴대번호	
신청인 이메일			
납부금액	매월 _____ 원	납부일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 출금계좌번호 기재 시 휴대폰번호계좌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_____ 인 또는 서명

사단법인 오픈넷 T. 02-581-1643 F. 02-581-1642 E. master@opennet.or.kr

